

V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4대강 살리기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본 사업 인근의 주변지역은 72개 시·군·구를 포함한다. 총 인구는 1,568만명(2005년 기준)으로 전국 인구의 33.2%에 해당한다. 행정구역 면적도 30,436km²로서 국토면적의 30.5%를 차지한다.



4대강 사업의 주변지역은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지역형 등 다양한 성격을 골고루 포함한다. 대도시형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시의 23개 구에 해당하는데,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의 3.4배로서 과밀 지역에 해당한다. 중소도시형은 총 24개 시로서 4대강 수계에 고르게 분포한다. 중소도시형의 인구밀도는 418명/km²로서 전국 인구밀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지역경제의 여건은 보다 낙후되어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지역형은 총 25개 군으로서 전반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특히 20개 군에서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프라·복지 등 생활여건도 열악한 실정이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지역발전정책은 4대강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을 활용한 여가공간 조성, 수변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자체유형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촌지역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는 문화와 역사,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물길로 4대강을 재탄생시켜 21세기 녹색 르네상스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역사·문화·생태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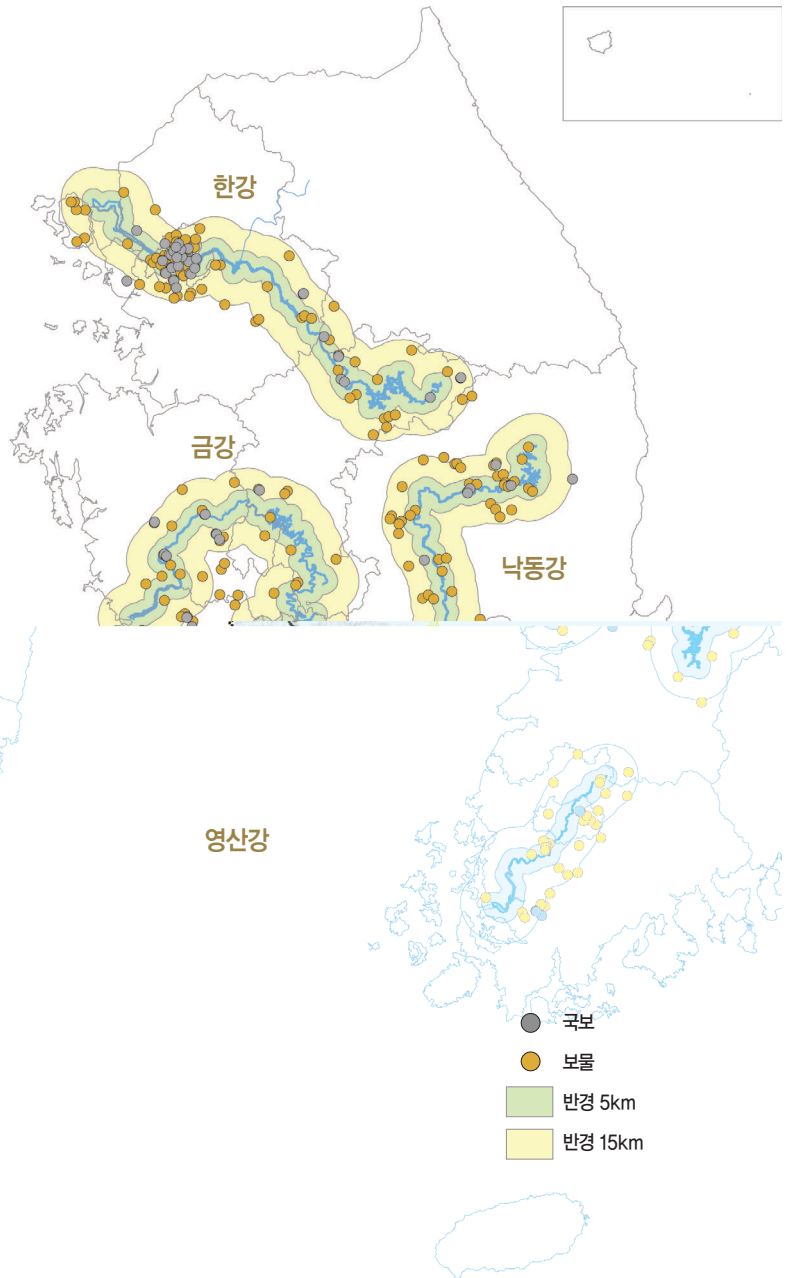
4대강 유역의 문화 특성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해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훌륭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강은 구석기, 신석기, 삼국시대 등 폭넓은 역사문화적 층위 등 선사시대부터 이어지는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으며, 남이섬 등 하천 특성이 반영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금강은 서해와 내륙을 잇는 고유하고 섬세한 백제문화자원과 철새도래지, 갈대 군락 등 천혜의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이 우수하다.

영산강은 청동기시대부터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풍부한 산물과 시·서화, 고건축물, 판소리, 음식 등 특유한 남도문화를 지니고 있다.

낙동강은 고대 가야, 신라의 화려한 역사시대를 거쳐 근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한 역사문화적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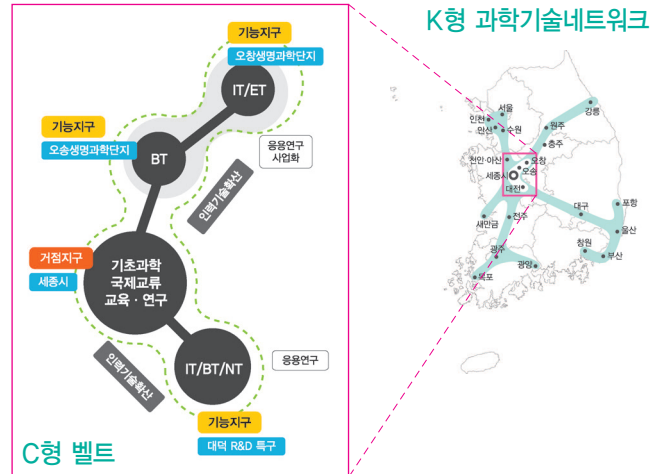


세종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추진되어온 세종시가 21세기 우리나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및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중심축이자 선진 일류국가로 선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서 세종시는 원안보다 약 3배로 대폭 늘어난 20.7%의 자족용지에 행정기능 대신에 과학벨트와 대기업 등 산업·대학·연구기능을 채워 총인구 50만 명의 도시로 건설된다. 도시 조성도 원안보다 10년을 앞당겨 집중 개발되며, 이에 따라 광역교통 및 도시교통 체계 구축도 조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세종시의 건설은 16.5조 원의 투자와 24.6만 명의 고용창출을 통한 자족성 충족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새로이 제공될 예정이지만, 유치대상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사업이 아니라 모두 신규사업 중심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의 진흥, 지원체계 구축 등에 기초한 발전전략으로서 과학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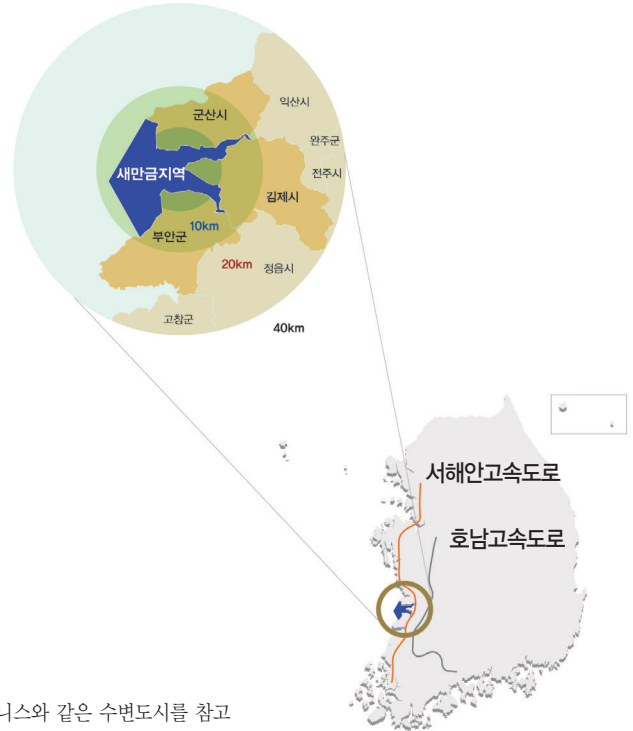
교육·과학 및 경제의 중심으로서 세종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세종시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인프라 확충과 생활권 연계를 도모하고, 백제·내포·충원문화권 내 관광자원의 연계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사업·거점대학 및 혁신·기업도시 등과 연계하여 공동발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청권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연결하는 C(Center)벨트와 전국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연결하는 K형 과학기술 네트워크는 과학비즈니스벨트 효과를 충청권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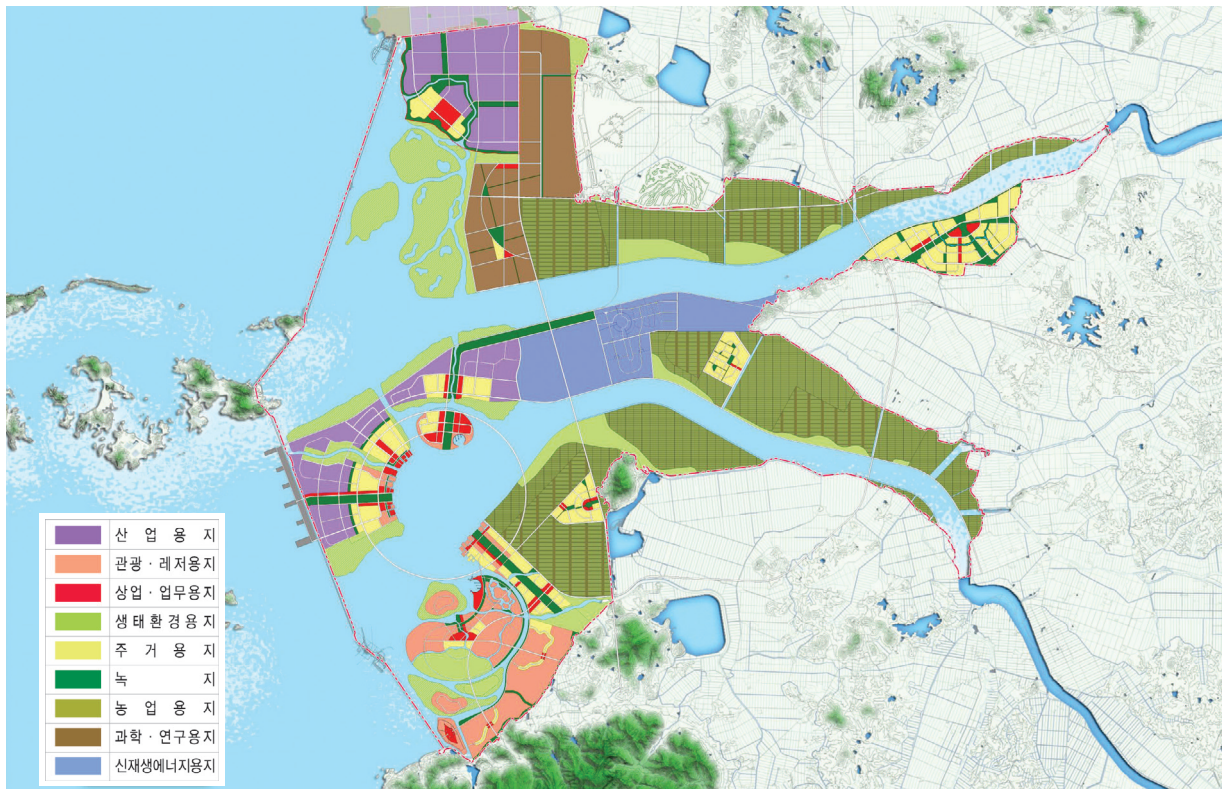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은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지역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보존하는 국책사업으로서 미래 비전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The City of Neo Civitas)'이며 글로벌 브랜드 네임은 '아리울 (Ariul)'이다. 6대 전략목표는 글로벌 신경계 중심거점, 복합문화관광의 메카,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청정생태의 보고, 세계적 명품 "새만금", 무결점 사업관리 체계 구축이다. 새만금사업의 5대 선도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선도사업 1 : 산업·관광·국제업무 등이 복합된 명품도시 건설
- 선도사업 2 :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
- 선도사업 3 : 매립토 확보 및 조달사업
- 선도사업 4 : 방수제 착공
- 선도사업 5 :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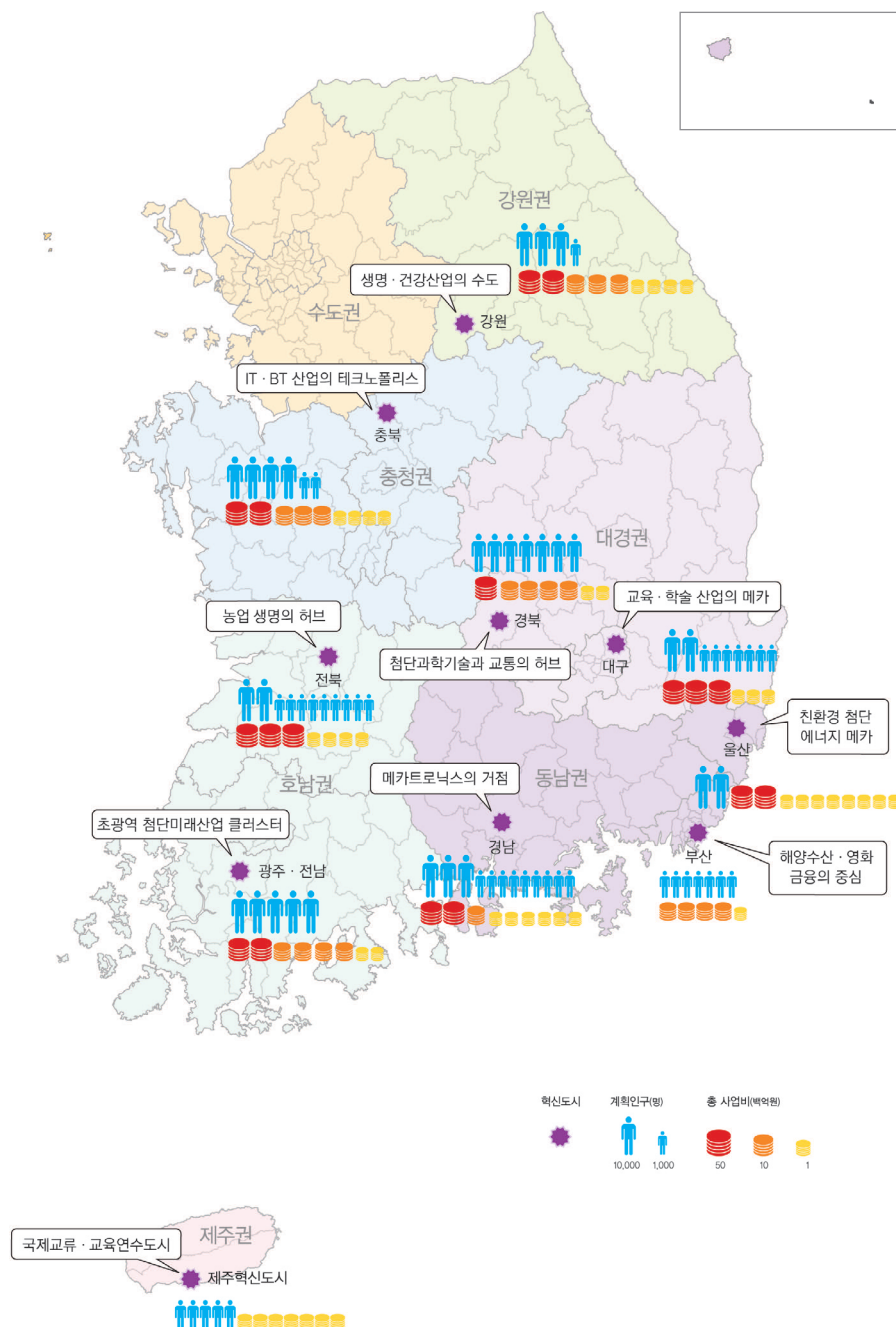
새만금의 중심도시는(67.3km², 새만금 전체 면적의 23.8%) 암스테르담, 베니스와 같은 수변도시를 참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복합도시로 개발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비용은 약 21조 원으로 용지조성비 13조 원, 기반시설 설치비 4.81조 원, 수질개선대책비 2.99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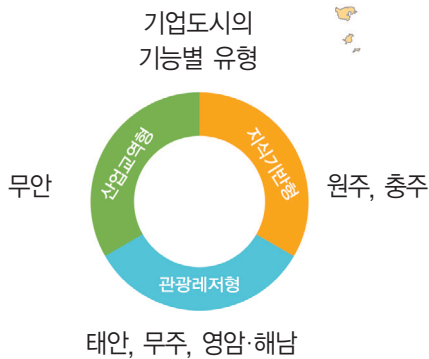
혁신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기능분산을 선도할 공공기관을 수용하면서 지방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2012년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157개 공공기관(예상 이전인원 47,000여명)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며,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개발 중이다.

혁신도시는 자원순환형 에너지타운 조성, 자전거 생활화, 녹색교통계획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로 건설된다. 교육여건의 개선과 여성(가족)친화적 도시의 건설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직주근접의 자족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발전정책과 연계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 특화발전 전략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도 함께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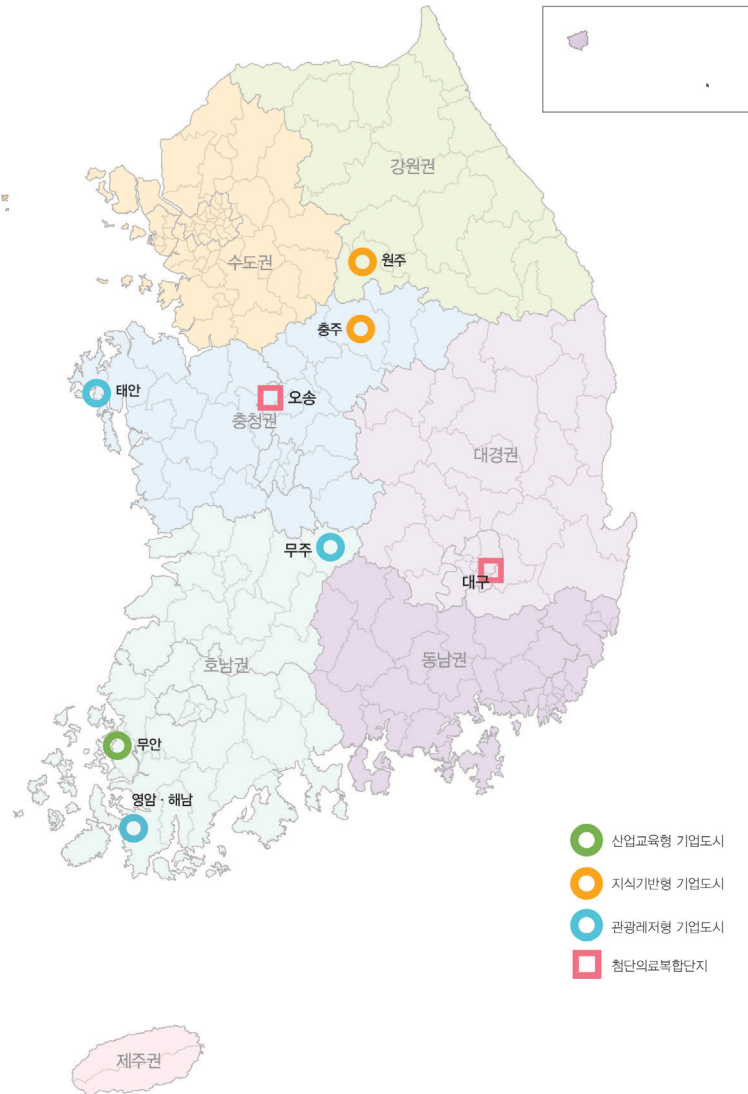


기업도시·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 유형으로는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 위주), 지식기반형(연구 개발 위주), 관광레저형(관광·레저·문화 위주)이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6개의 기업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기업도시는 생산기능 위주의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이 함께 개발되어 경쟁력 있는 도시,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개발의 주체가 되며 조성과 분양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즉,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투자를 통해 자족성을 확보하면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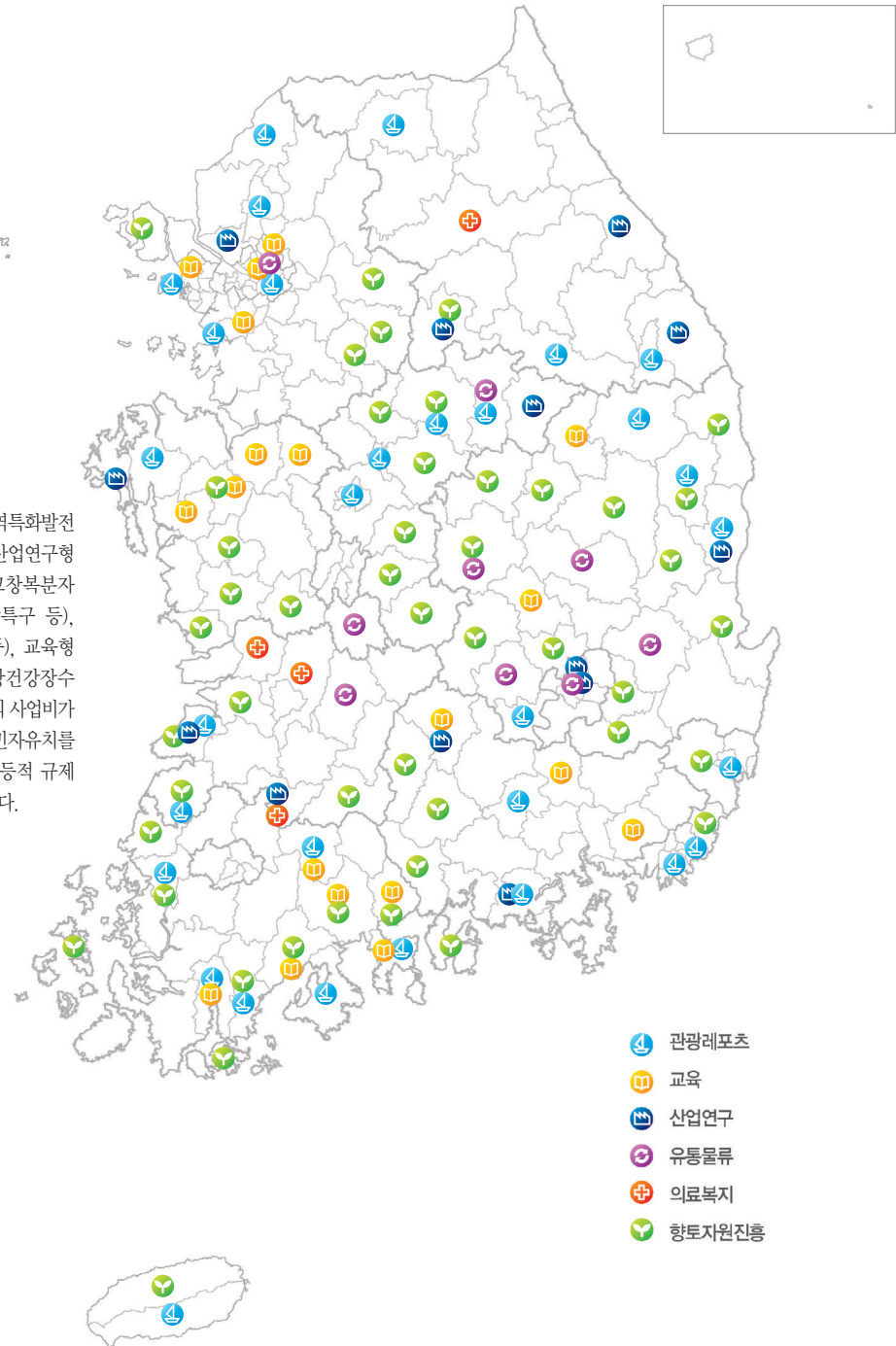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임상 및 제품시험, 제품 개발 등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를 집중 배치하여, 첨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 연구단지이다.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인 첨단 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곳은 대구 신서혁신 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2개이다. 대구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충북은 바이오 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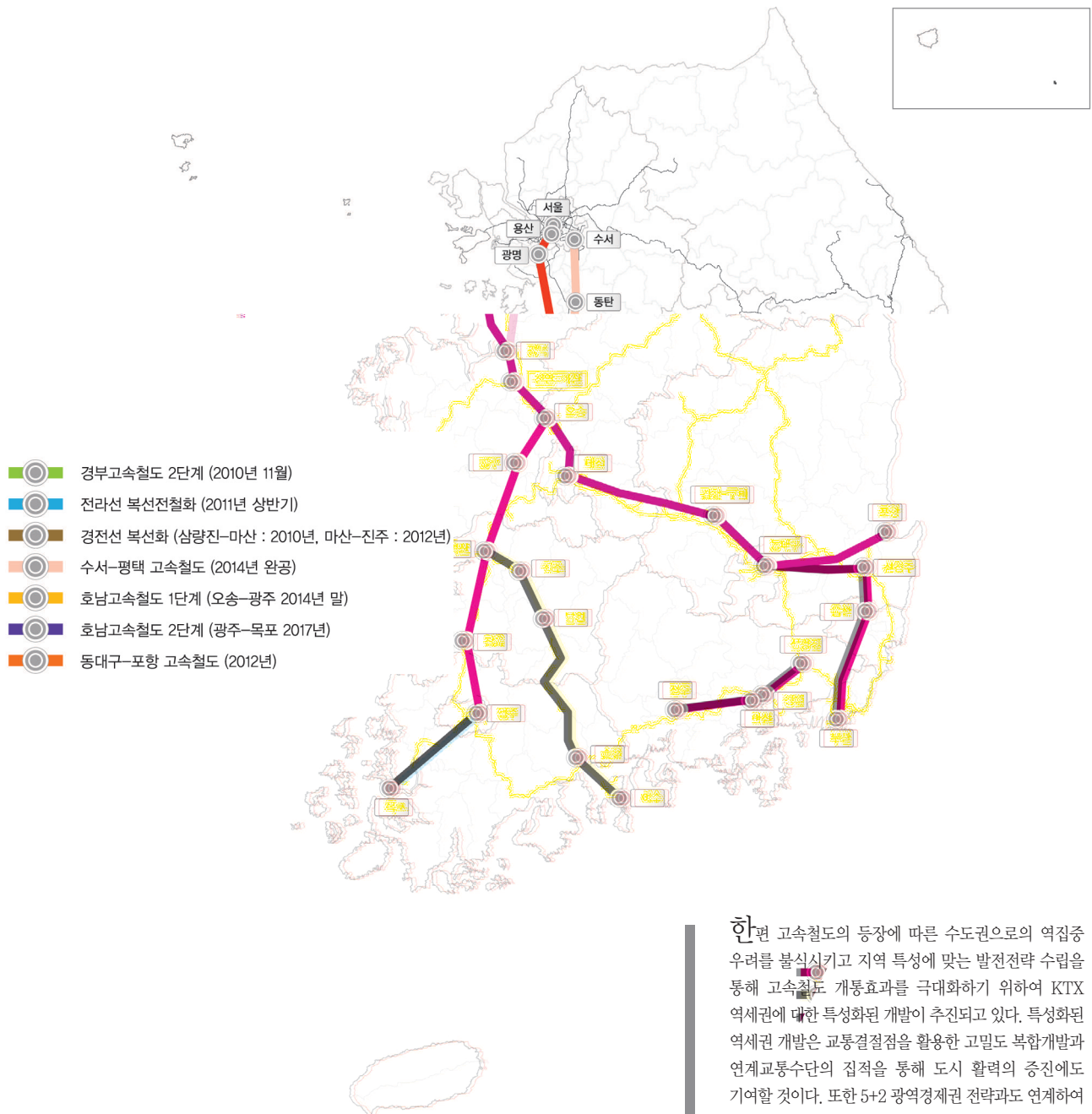
2009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32개의 지역특화발전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산업연구형(순창장류산업특구 등), 향토자원진흥형(고창복분자산업특구 등), 유통물류형(대구약령시한방특구 등), 관광레포츠형(국토최남단마라도청정특구 등), 교육형(거창외국어교육특구 등), 의료복지형(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등)이 있다. 지금까지 총 77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7.5%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되었다.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등적 규제 완화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로는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가 있다.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는 절차를 밟는다.

KTX역세권 및 네트워크

2004년 4월 KTX 시대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는 전국이 반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국토구조로 재편되었다. 이와 함께 도로 위주의 교통패턴에서 벗어나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을 활성화 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한편, KTX 역사 및 주변지역의 복합용도개발은 쇠락한 도심의 재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2010년 11월 완공예정), 호남고속철도 1단계(2014년 말 완공예정) 및 2단계(2017년 완공예정)와 함께 전라선, 경전선 등의 고속화 철도사업 등이 완료되면 전국의 대도시는 모두 1~2시간 내로 연결될 전망이다.



전국 자전거도로망

21세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및 교통체증 문제 등에 대응하는 녹색교통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곳곳을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을 일주하는 폭 3m 자전거 전용 도로망의 건설은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서 3,329km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자전거 길 조성도 연계 추진되는데, 제방과 고수부지를 따라 총연장 1,297km의 자전거도로가 역사문화 탐방, 생태탐사, 레저·스포츠 등 테마별로 조성된다.


 $3,329\text{km} + 1,297\text{km} = 4,626\text{km}$

(전국일주 자전거길) (4대강 자전거길) (전국 자전거도로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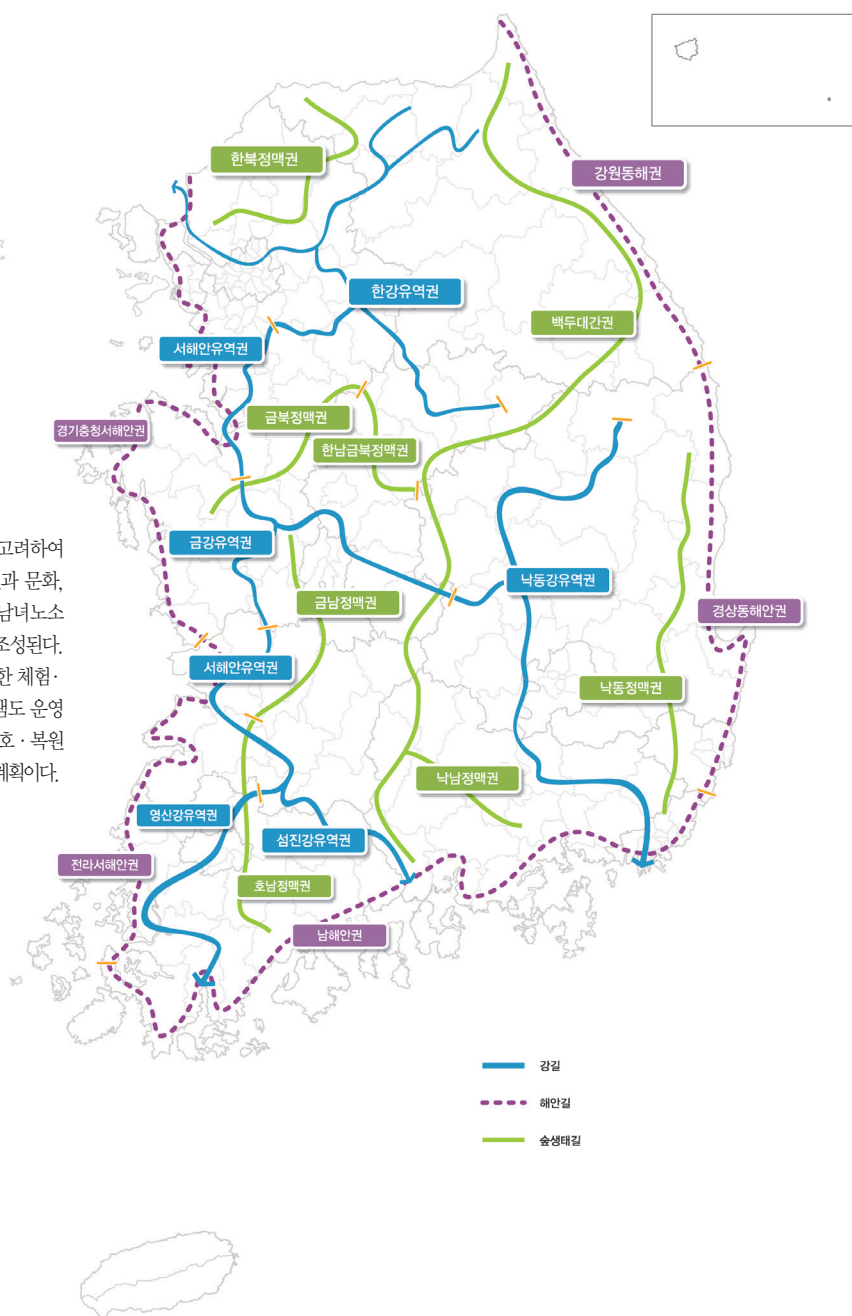
자전거도로는 행주대교에서 출발해서 인천 강화, 전남 목포, 부산 해운대, 경북 포항,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거쳐 행주대교로 돌아오는 노선으로서 경치 좋은 해안과 자연 그대로인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개발된다. 해안 일주와 접경지역의 자전거도로는 단계별로 개발되고, 지자체의 자전거도로와도 연결되며, 권역별 테마노선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된다.

범례	구분	연장(km)	노선안
	계	4,626	12개시도, 80개시군구
	수도권 서해안	548	행주대교 하부~평택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목포시
	남해안	1,652	목포시~부산해운대, 제주도
	동해안	634	부산해운대~강원도 고성군
	접경지역	495	강원도 고성군~강화도 양사면
	4대강	1,297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자전거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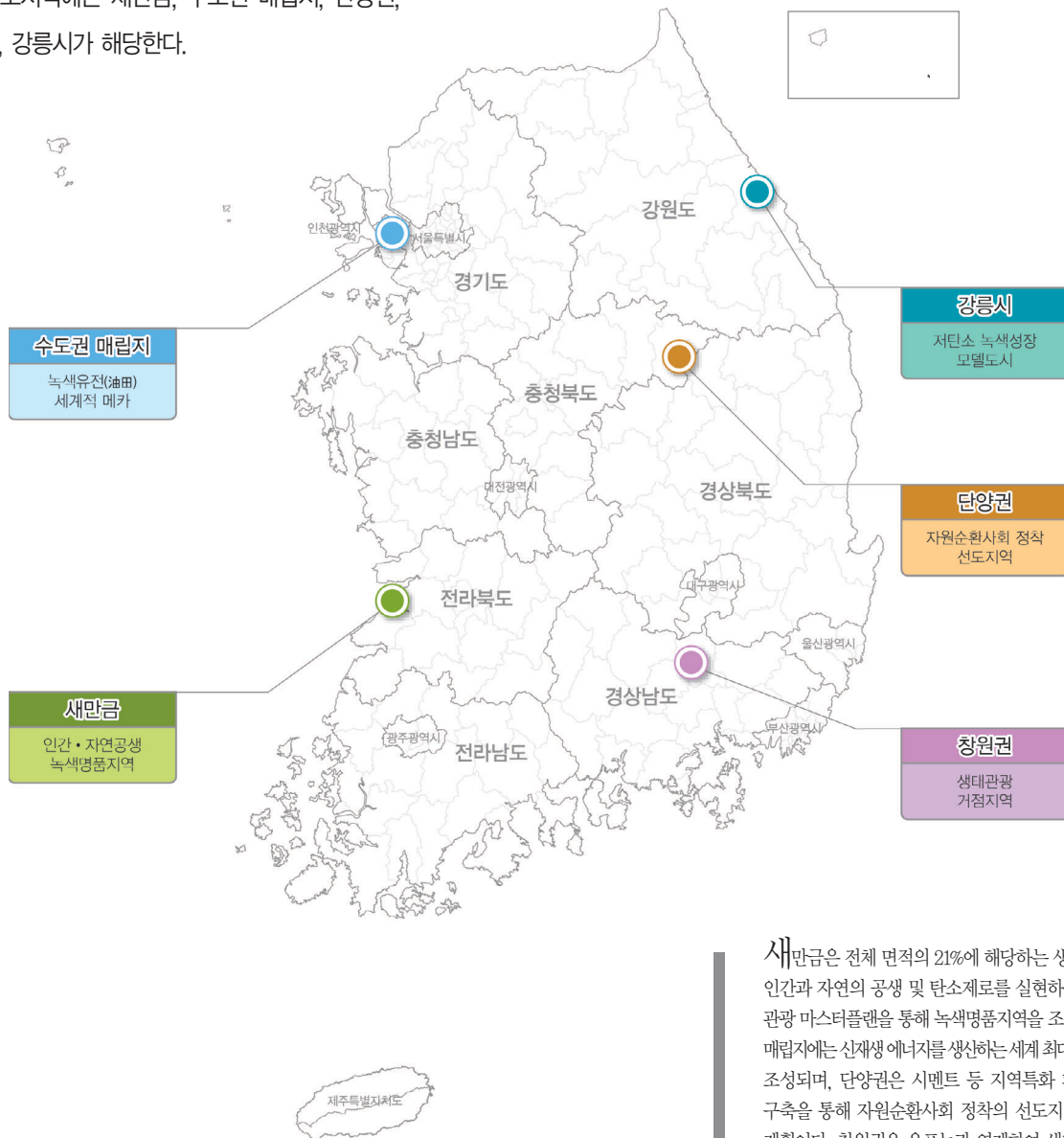
웰빙·슬로우 라이프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생태 및 문화자원을 국민들이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가 조성된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생태 및 문화자원을 탐방(체험, 학습, 감상 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중심의 길'로서 국가급으로 인증 받은 탐방로로 조성되며, 2012년까지 1,000km가 조성될 계획이다. 탐방로는 강길, 해안길, 숲생태길 등 3대 기본유형으로 조성되지만, 각 유형별로 생태적 배경을 가진 시골길, 도시길, 자전길, 옛길 등의 다양한 테마도 부여될 수 있다.

탐방자원의 가치와 전국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급으로 선정된 탐방로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하면서 가족단위 남녀노소 온 국민들이 쉽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길로 조성된다. 이러한 탐방로에는 다양한 탐방자원에 대한 체험·안내시설이 보완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탐방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복원 관리를 통해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5대 선도지역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의 중기감축과 나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미 퍼스트 운동’과 같은 녹색생활 실천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5대 선도지역 조성사업이 전국에 걸쳐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대 선도지역에는 새만금, 수도권 매립지, 단양권, 창원권, 강릉시가 해당한다.



새만금은 전체 면적의 21%에 해당하는 생태환경용지에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탄소제로를 실현하는 생태복원·관광 마스터플랜을 통해 녹색명품지역을 조성한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가 조성되며, 단양권은 시멘트 등 지역특화 폐자원 순환망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정착의 선도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창원권은 우포늪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및 에코 캠프산업의 특화지역으로 육성되며, 강릉시는 녹색교통, 녹색 도시디자인 및 신재생에너지 등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도시의 표준 모델로 조성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발전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고품격도시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여성과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선진화 된 도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작은 세미나'에서 출발하여, 2006년 성별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2009년도에 익산시와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화성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구미시 등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준비 중이다.

여성친화도시의 일반적인 사업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쾌적함을 도모하는 도시 공간 구축
(소생활권 구축, 보행친화형 도로망, 승강장 및 야간 지하도 조명 개선, 임산부 및 유아동반 가족 전용주차장,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 등)
- 남녀 모두 일과 가정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고용 환경 조성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 여성 참여 활동을 통한 품격 있는 지역 교육·문화·예술 창조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간 운영, 주민 통합 지원 문화서비스, 공공시설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그린스쿨, 지역 동아리 활동 등)
- 노약자를 배려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 정착
(포괄적 돌봄 서비스, 다세대 하우스, 공공보건 정보화 사업 등)
- 지역 거버넌스 운영
(여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면 지역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밀착형 여성정책 및 지역발전계획 추진
-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문화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 지역정책의 소프트웨어 제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역이미지 제고와 장소가치 증진

